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채권전략 인예하 yhahn@kiwoom.com



## 11월 금통위 Review: 인하 시점, 2026년 4분기로 전망 수정

### Check Point

- 한국은행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 성장 개선세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안정 리스크 지속,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경계감 등에 금리 동결 결정
- 소수의견 1명이 유지되었으며,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은 3명 수준으로 축소되며 시장 우려 대비 비둘기 신호가 존재.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1.0%와 내년 1.8% 수준으로 2%대 성장까지도 제시한 기관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시장 우려 대비 완만한 수준으로 제시
- 당사는 내년 인하 시점을 1분기에서 4분기로 변경. 부동산 가격 상방 흐름이 완화된다는 전제 하에 기존에는 재정 확장 정책의 공조 차원의 인하를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길어지는 부동산 가격 상방 압력과 한은의 물가에 대한 경계감에 상반기 중 인하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판단. 다만 하반기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둘 필요. 내년 하반기 재정 집행의 둔화와 함께 반도체 경기 성장 속도 둔화 시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동결 후 인상보다 인하 사이클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
- 시장금리는 인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오버슈팅 구간으로 판단. 과거 금리 동결기 시작 구간에서의 국고 3년과 기준금리 스프레드는 평균 40bp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50bp 이상 벌어진 레벨은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 인상이기 아닌 동결기라는 인식과 함께 시장금리는 하향 안정화되겠지만, 상반기 중 공급 확대와 통화정책 부재로 국고 3년물은 2.80~2.95%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며 수시로 상방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으나, 소비와 수출 등 성장 개선세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안정 리스크 지속,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경계감 등에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최근 불거진 한국은행의 인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약화되는지 여부였다. 한국은행 금통위원 가운데 신성환 위원은 여전히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해 인하의 여지를 남겨뒀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은 3명으로 지난 회의의 4명에서 축소되었으나, 일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이 2명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매한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성장률 전망치 또한 올해 1.0%, 내년 1.8%로 제시(기존 각각 0.9%, 1.6%)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내년 성장에 대해서는 2% 성장을 예상한 기관도 있었다는 점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매파적인 분위기 대비로는 비둘기적인 신호도 존재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물가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켰다. 기존 물가 전망치를 2.0%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물가 전망치 또한 1.9%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근원물가 상승률 또한 내년 2.0%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치를 제시했다.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이 지속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압력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통방문구를 통해서도 인하 가능성을 일부 축소시키는 움직임이 있었다. 기존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초를 이어나가되' 라는 문구에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로 변화한 것이다.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라는 문구가 없어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평가를 하면서 사실상 동결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

당사는 내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을 1 분기에서 4 분기로 전망을 변경한다. 부동산 가격 상방 흐름이 완화된다는 전제 하에 기존에는 재정 확장 정책의 공조 차원의 인하를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길어지는 부동산 가격 상방 압력과 한은의 물가에 대한 경계감에 상반기 중 인하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가의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기도 어렵지만, 최근 2~3 년과 같이 물가 상방에 대한 경계감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물가라는 변수는 여전히 영향력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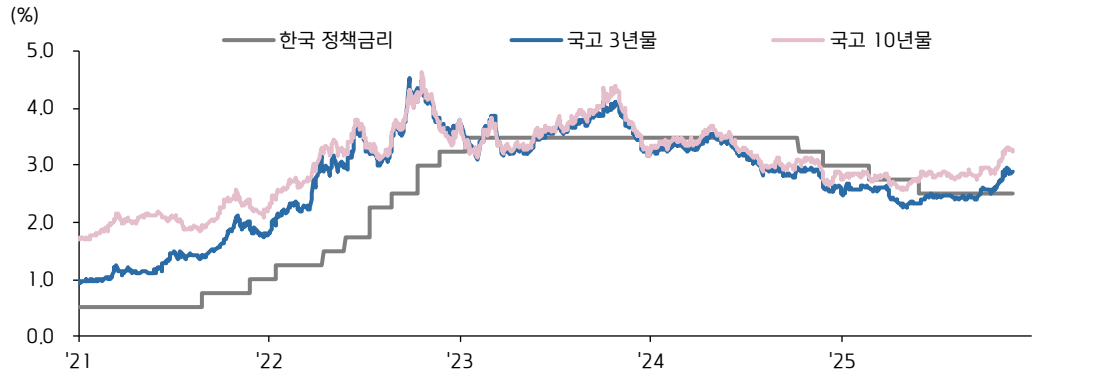
그럼에도 하반기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둘 필요가 있다. 물가 상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높다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현 수준이 유지될 경우 물가 하방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 경기 흐름이 내년 하반기에는 둔화된다면 재정 정책 집행 둔화와 함께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또한 비 IT 부문의 성장이 높지 않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2025년 5월부터 이어진 동결구간 이후의 정책이 인상으로 보기 보다는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27일 금통위 이후 나타난 시장금리 상승은 인상 전환의 가능성을 반영한 오버슈팅 구간으로 평가한다. 과거 금리 동결기 시작 구간에서 국고 3년과 기준금리의 스프레드 평균 수준이 45bp 였다는 점에서 현재 50bp 이상으로 확대된 레벨은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이며 매수 매력은 높은 구간으로 인식한다. 이후 정책 기초가 인상기가 아닌 동결 장기화로의 인식이 강화될 경우 국고 3년물은 최근의 상승분을 되돌리며 2.85% 내외에서 등락을 보일 것이며, 국고 10년물 또한 3.2% 내외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으로 가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은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유의해야 하는 점은 현재 조성된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완화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장기물의 경우 과거 레벨과 비교할 때 추가 상방 리스크가 열려 있어 단기물 중심의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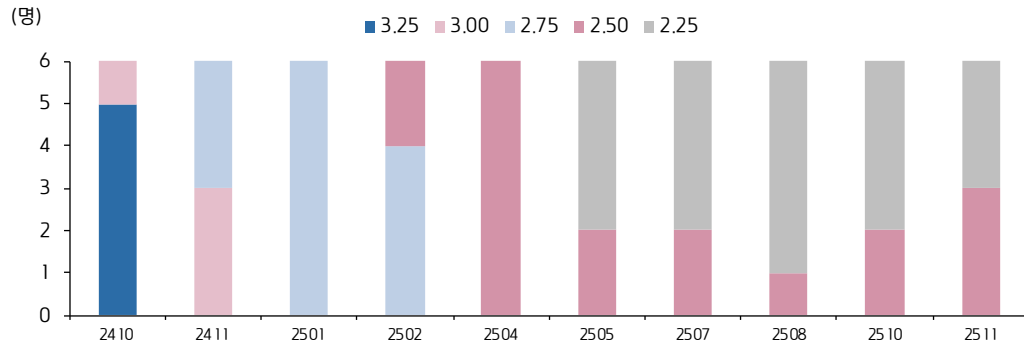
인상 우려로 인해 취약해진 투자 심리가 완화되기까지 수시로 금리의 상방 리스크는 상존할 것이다. 인상 우려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불거진 물가 상방 리스크가 완화되어야 가능하다. 환율 상승 흐름이 다소 진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지속, 코스피 지수 상승 속도 조절 등을 통해 자산 시장 과열 우려가 다소 완화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현재로서 내국인 해외 투자 증가 흐름에 따른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 속 자산 시장의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 2.80~2.95%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WGBI 편입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금리 상방을 제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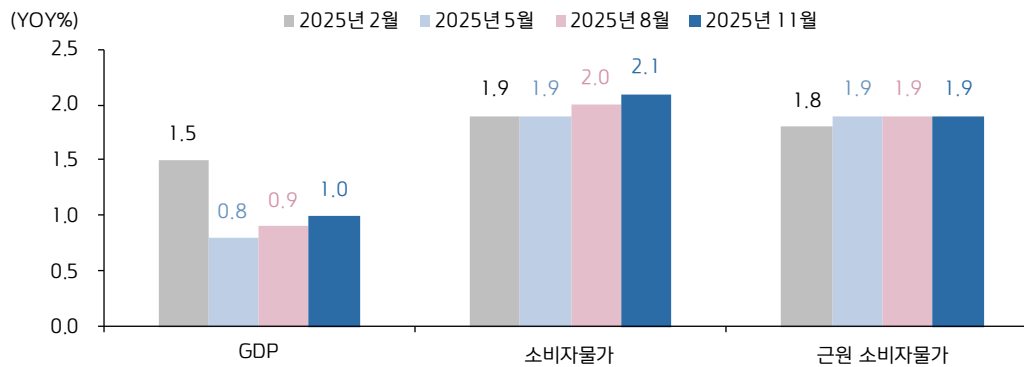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행 금통위원 3개월 내 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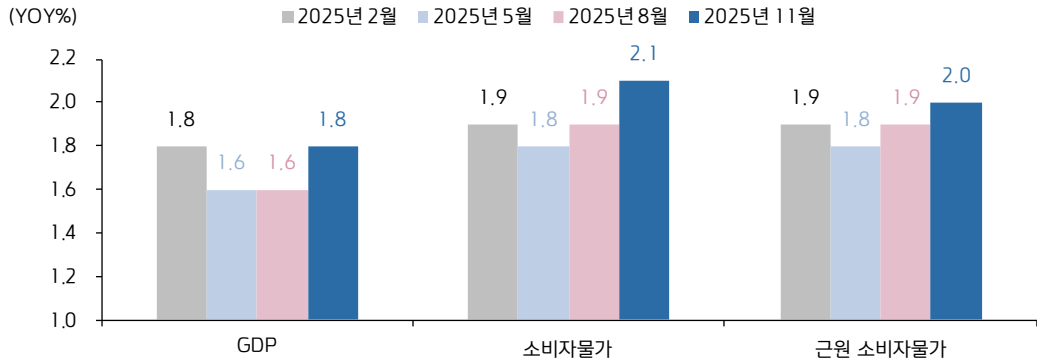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행 2025년 경제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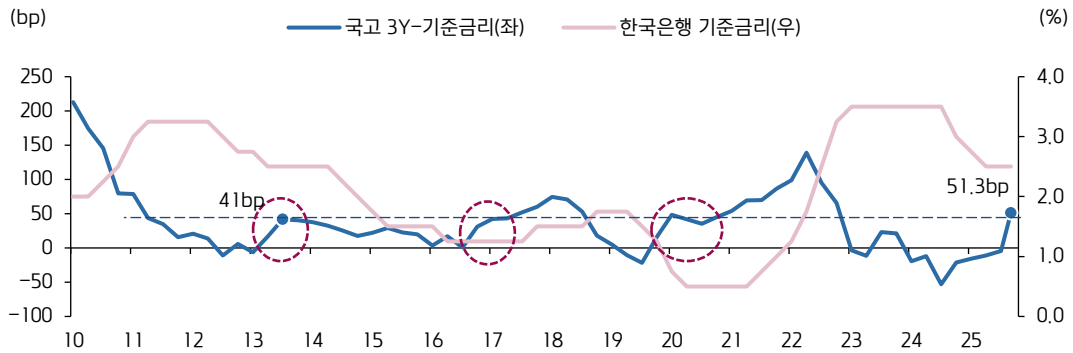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행 2026년 경제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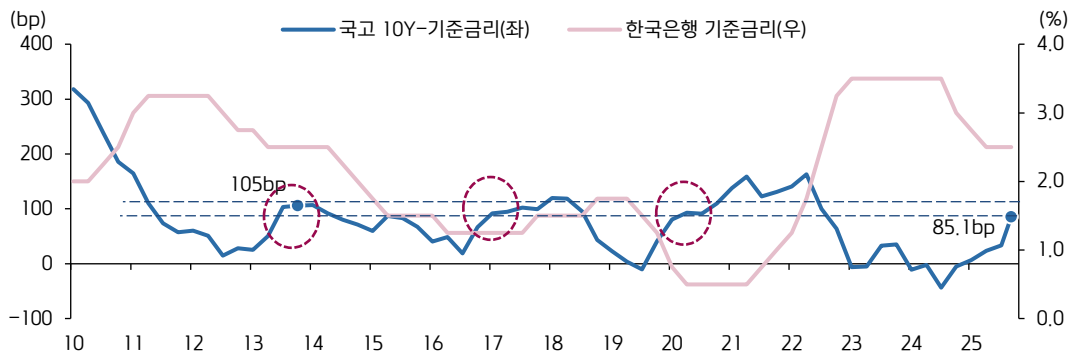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고 3년물과 기준금리 스프레드 추이(분기 평균 기준)



자료: IMF,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고 10년물과 기준금리 스프레드 추이(분기 평균 기준)



자료: IMF,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통화정책방향문 비교

	2025년 10월 통화정책방향	2025년 11월 통화정책방향
정책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u>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u>
세계경제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하였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주가는 AI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미·중 무역갈등 완화,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다.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변화, 주요국 재정상황 등에 영향받아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다.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AI 부문 고평가 우려 등으로 조정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겠지만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은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각각 지난 8월 <u>전망치(각각 0.9%, 1.6%)를 상회하는 1.0% 및 1.8%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u>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u>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u>
소비자물가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2.0%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9월 중 2.5%로 전월(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환율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 및 1.9%)과 근원물가 상승률(각각 1.9%) 모두 8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여행 관련 서비스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류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10월 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식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 및 2.2%로 높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중 전월과 같은 수준(2.6%)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 경로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u>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는 8월 전망치(2.0%)를 상회하는 2.1%,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각각 1.9%)를 상회하는 2.1% 및 2.0%로 전망된다.</u>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안정세가 이어지다가 9월 하순 이후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대미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국고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높아졌다. 주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다시 확대되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400 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금리는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조정되었다. <u>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되었으나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u>

정책방향	<p>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전망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p>	<p>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u>국내경제는 성장을 전망이 상향조정되었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고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u>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u>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u>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p>
------	---	---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리

질문	응답
금통위원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p>3명은 금리 동결, 3명은 인하 가능성 열어둠. 금리 동결 의견을 낸 위원들은 지난 통방과 비교할때 성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 금융안정 부문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은 성장위험 상하방 위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고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p> <p>소수의견을 낸 신성한 위원은 성장과 물가가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민간 회복이 더딘만큼 빠른 시점의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p> <p>현시점과 3개월 후를 고려할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위원은 없음. 현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님.</p>
고환율 지속에 따른 영향	<p>레벨 문제도 있지만 최근 몇주간은 환율에 대해 두가지 우려가 있음. 한방향으로 쏠려가는 분위기가 한가지.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주도하고 있는 점이 우려. 이전에는 달러의 강세 속에 우리 환율이 다른 국가 통화와 연동되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 과거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던 것과는 달리 CDS 프리미엄 등을 보면 금융안정의 우려보다는 한방향으로 쏠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우려가 있음.</p> <p>해외 투자 측면에서 보면 장부가측면에서 이익을 보는 주체가 있지만 내수에는 손해를 보는 주체가 있음. 환율의 절하로 수익성이 높아보이나,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 등도 남아있고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우려가 되는 상황임. 과거의 외채가 많았던 상황과는 다르고, 미 연준의 급격한 인상 시점과 다르며,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한방향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음</p>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고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경우 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	<p>인하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으나, 인하 기조가 사라진다면, 금리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시그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통화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통화정책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p>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도 동조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견	<p>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많은 상황인데,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도 많음. 국민 노후 자산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방침임. 국민연금은 다른 국민연금과 다른 것이 있음.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노후자금을 지급해야하는 시점이 있음. 자산규모를 계속해서 증가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했다가 빠르게 소진되는</p>

성향이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음. 절하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원화로 표시한 수익률이 크게 보임. 막상 가져올 때는 절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음. 국민의 노후 자산을 고려하면 향후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의 헷지가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성과평가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

한쪽의 쏠림도 중요함. 자산 배분을 통해 해외로 가져나가는 자산과 헷지의 시점, 언헷지의 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이미 공유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 환율의 레벨에 따른 국민연금의 헷지 시점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됨. 전략성 모호성을 키울 필요가 있음. 환율 수준의 변화에 따른 공식 변화와 신축성도 필요함. 환율이 계속해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신축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시에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많지 않았음. 나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면 개인들의 해외 투자에 맞춰 국민연금의 투자도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포워드 가이드를 통해 동결 인하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추가 인하 여부라는 표현으로 보면 인하 기대가 달혀진걸로 볼 수 있는데, 성장 내 기업별 체감이 굉장히 다름. 인하 기조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지?

성장률 상향에 따른 금리 인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는 여러 고려 사항이 필요. 3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둠. 1.8% 성장에는 반도체 IT 중심의 성장. 비 IT 성장은 1.4% 수준으로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 반도체로 인한 갭 매움이 있겠으나, 인하시클이 종료하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